

이슈브리프



-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박 수 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장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 왜 문제이며 해법은 있는가?
전 광 희 |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인구학회장
-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오 유 석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김 영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문화 뉴스 분석과 미디어의 역할
정 의 철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 강한 여성, 약한 남자?
정 영 희 |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박 수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장

최근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회에서는 낮아졌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Nature, vol. 460).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들에는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다음과 같은 국제지수가 있다.

-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 여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
-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

2008년 UNDP에서 발표한 HDI, GDI, GEM 결과에 따르면, 관련 지수 참여국인 108개국 가운데 우리 사회는 HDI 22위, GDI 23위, GEM 6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런데 참여국 108개국의 합계출산율(TFR)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TFR 1.1(2006년 집계)로 108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콜러 등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간개발지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서구사회에서 출산율도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한 국가지수이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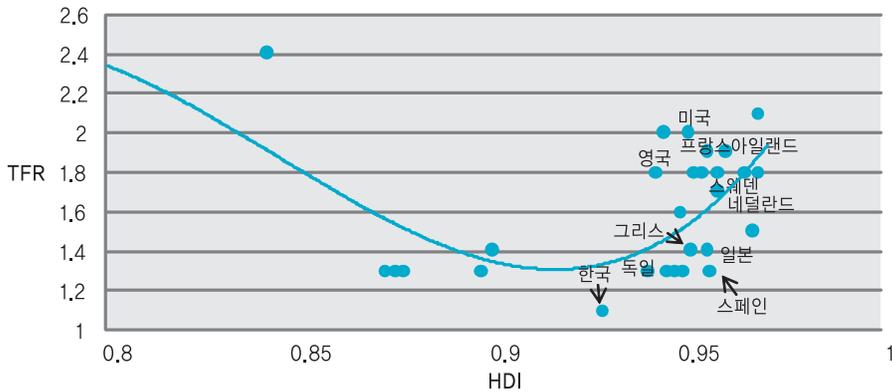
- ① 장수: 평균 수명으로 측정
- ② 교육수준: 성인 문자 해독률 및 초,중,고 및 전문대학 포함 대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 대한 총 취학률의 합계로 측정
- ③ 생활수준: 1인당 실질 GDP(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의 경우 한 국가의 인간개발지수(HDI)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합계출산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OECD 국가들은 HDI가 0.8이상인 상위 랭크 국가들이다. 그중 HDI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고출산 국가이

며 HDI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등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다.

OECD 국가 중 각종 사회지표와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예외적 경향을 보이는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로 이들 국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 수준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 국가의 종교적,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인간개발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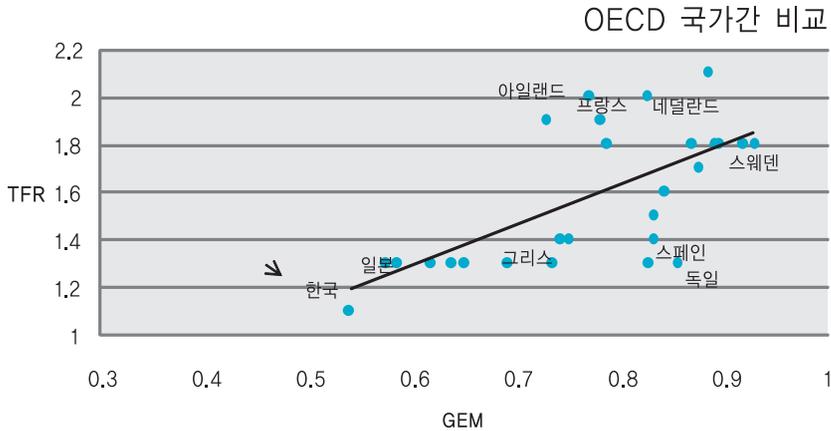
그렇다면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어떠할까? 여성 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평등 측정 지수이다. 여성 권한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경제 자원에 대한 지배력: 남녀 소득비로 측정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여성 권한척도(GEM)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합계출산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GEM이 높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상대적 고출산 국가이며 GEM이 낮은 한국, 일본,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그리스 등은 상대적 저출산 국가이다.

- ①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 여성과 남성의 행정·관리직 비율 및 전문기술직 비율로 측정
- ② 정치적 참여와 결정권: 여성과 남성 국회의원 비율로 측정

〈그림 2〉 OECD 국가의 여성권한척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그렇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으면서 여성의 권한은 낮은 사회에서의 출산율은 어떠할까?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개발지수(HDI)와 여성권한척도(GEM) 사이의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즉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 정도는 높으면서 양성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기형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HDI도 높고 GEM도 높은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반면, HDI는 높으나 GEM은 낮은 한국, 일본에서 세계 최하위권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한 사회의 사회경제발전 수준이나 성평등 수준과 같은 거시적인 국가 지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 사회의 사회경제발전 수준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출산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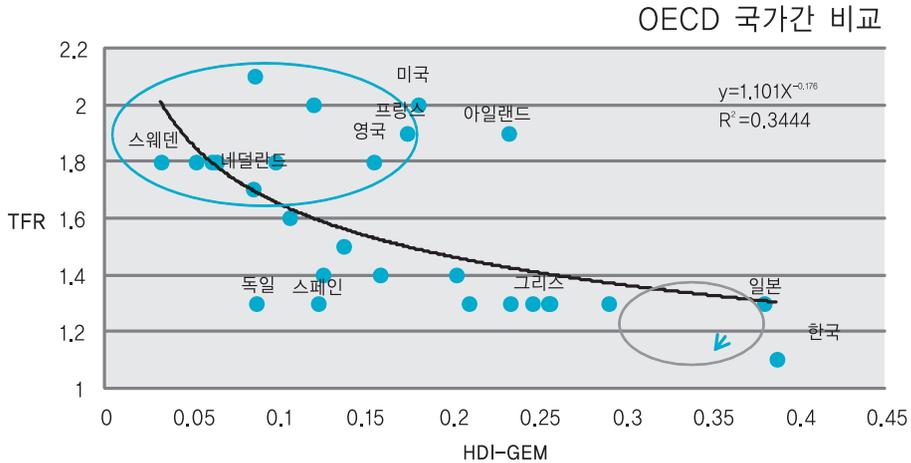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인구변천 초기 단계에서 사회경제발전 수준과 성평등 수준은 해당 국가의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콜러 등의 연구결과나 위의 여러 도표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한 사회의 사회경제발전 수준과 성평등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던 출산율은 반등하며 어느 정도 안정된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사회나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사회경제발전 수준은 매우 높으면서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성평등 수준을 지닌 나라에서 기형적으로 낮은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 극복에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저출산 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그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일 것이다.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 취업은 남녀

〈그림 3〉 OECD 국가의 '인간개발지수와 여성권한지수의 격차'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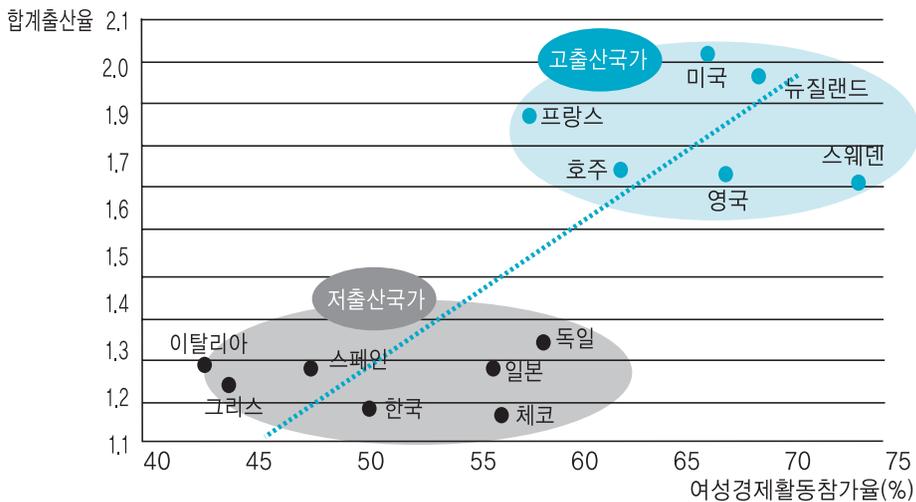


를 막론하고 시민권을 구성하는 최우선의 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거스를 수 없는 개인적·시대적 요청이며 일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여성 노동참여

와 저출산 사례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지닌다. 즉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출산율도 높은 편이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출산율도 낮다.

〈그림 4〉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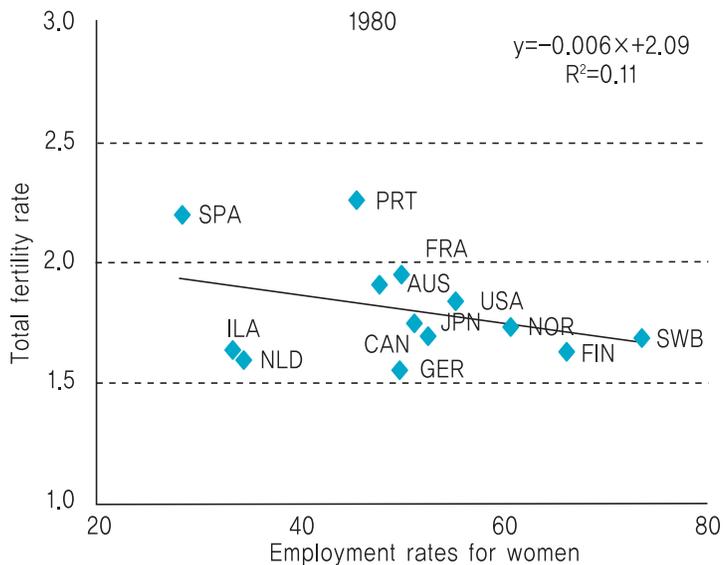


이슈브리프

그러나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 사회에서도 30년 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부(-)의 관계였다. 이와 같은 관계는 20년후인 2000

년에 역전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은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해진다.

<그림 5> 1980년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6>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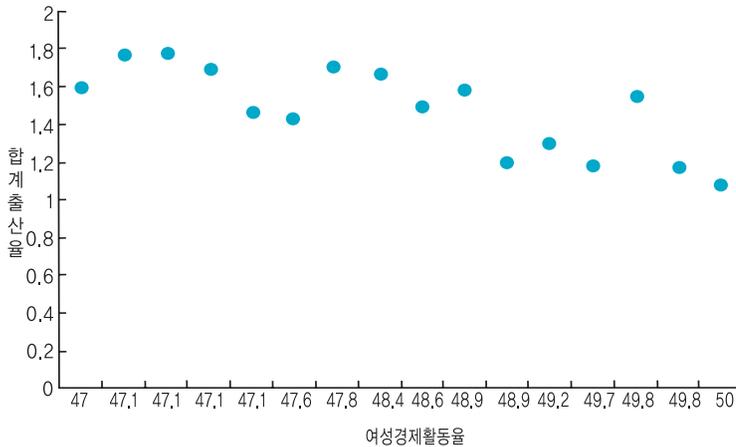
이는 1980년 OECD 국가들의 여성취업율과 출산율 관계와 유사하며, 현재 우리사회는 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단위의 성평등 수준이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맞는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미시적인 단위에

서 성평등 수준이 합계출산율과 맞는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 가족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2005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취업여성의 경우 가족 내 성평등 정도가 둘째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혼 취업 여성의 과도한 이중 부담은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 지속’과 ‘자녀 출산’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분석 결과, 이 둘을 중재하는 요소로서는 ‘가구소득’이나 여

〈그림 6〉 한국의 1980년~2005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성자신의 '소득' 과 같은 '가용 자원' 보다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과 같은 '가족 내 부부간 성 형평성 (gender equity)' 이 보다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하루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함을 알 수 있다.

성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의 노동권 보장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도적 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고용조치의 동태적 경제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의 남녀 협력 및 사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돌봄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중요성을 남성, 여성,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공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경영, 근로자 친화 경영의 정착으로 개인, 기업, 사회가 함께 하는 미래

사회 지향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활성화된 노동력의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를 달성함으로써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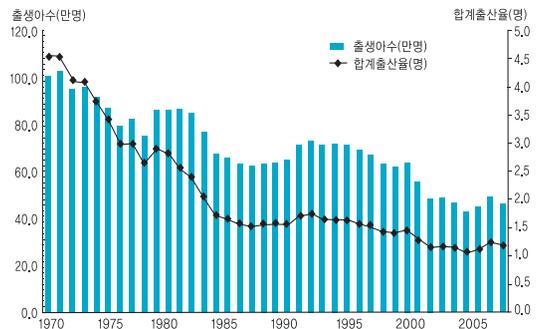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 왜 문제이며 해법은 있는가?

전 광 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인구학회장

통계청은 올해 8월에, 2008년의 합계출산율을 1.19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1970년 4.53명의 1/4에 불과하다. 출생아수는 1970년대에 100만 명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80만 명대, 1990년대 70만 명대로 계속 줄어들었다. 최근 4년의 출생아수를 보면, 2005년이 43.8만 명, 2006년이 45만 명, 2007년이 49.3만 명으로 반짝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46.6만 명으로 주저앉았다. 이들 수치는 모두 197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데, 지난 39년간에 걸쳐 출생아수가 합계출산율보다 느리게 줄어든 것은 출생아수의 모수인 가임여성 수가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출산력 지표: 197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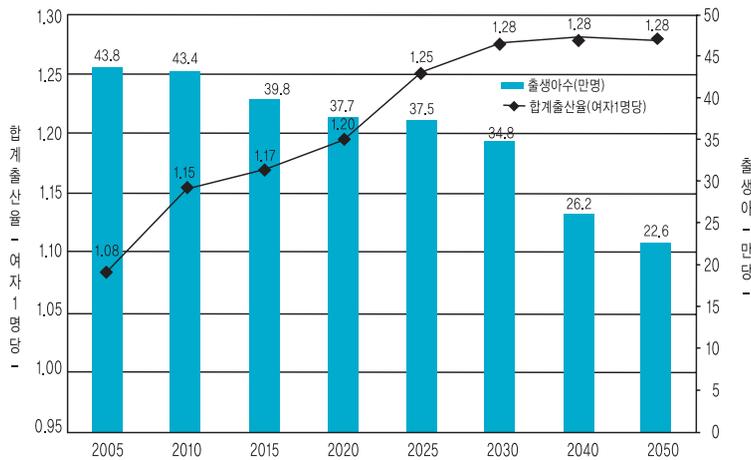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2006년과 2007년의 두해에 걸쳐 일어난 출생아수의 증가는 저출산 정부대책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쌍춘년”, “황금돼지해”라는 역년(曆年)의 특이한 산물이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래 출생아동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저출산은 당장에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물론 영유아나 가임여성을 고객으로 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러면 왜 저출산, 특히 합계출산율이 1.0에 근접하는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검토하여 보자.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1.0에 근접하는 출산율이 영속화된다면, 출생아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부터 50년 아니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신생아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인가? 최근의 장래인구는 2006년에 작성된 것으로, “표준” 시나리오는 중위 가정의 출산율에 사망률과 국제인구이동의 가정을

짜서 맞춘 것이다. 중위가정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연장하지만, 미혼여성의 증가, 혼인연령의 상승 등의 추세가 추계시작 15년 후인 2021년에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불능 등의 널리 알려진 출산억제요인들이 작용하여 출산율이 더욱 더 감소하게 된다면, 표준시나리오의 추계결과는 더욱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 표준시나리오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2005-2050



장래인구에서 출산율 중위가정은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는 1.08에서 2050년에는 1.28로 약간 늘어났다. 표준 시나리오에서 2025년의 출생아수는 37.5만 명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6.3만 명이 적고, 2050년의 출생아수는 22.6만 명으로 2025년과 비교할 때, 21.2만 명이 적다. 이것은 2025년의 출생아수가 2005년의 수치보다 14%까지 줄 수 있으며, 2050년에는 2005년 수치의 50%까지 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에서 2050년에 출생아수는 격감하고 있다. 표준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이 2050년에는 2005년보다 출산율이 약간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격감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가입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입여성은 2005년에는 1,336만 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022만 명으로 300만 명이 줄고, 2050년에는 637만 명으로 700만 명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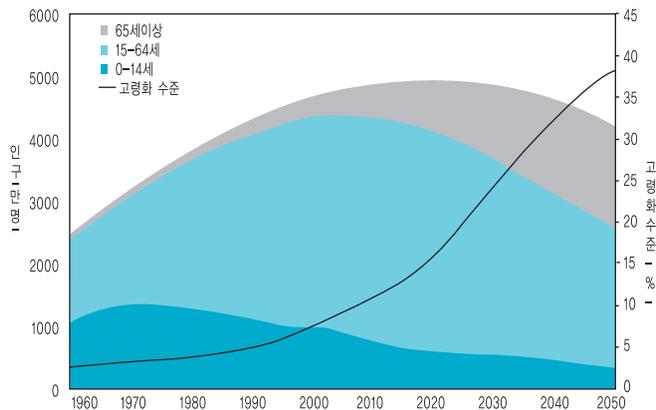
장래인구에서 출생아수 감소에는 향후 1.0에 근접

이슈브리프

하는 출산율의 영속화에 못지않게, 가임여성수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산율 중위가정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 시나리오를 연장하여 계산을 해보면, 2100년의 출생아수는 11.2만 명으로 2050년 수치의 절반에 이른다. 가임여성수가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출산율을 약간 올리는데 성공하는 정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금방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흔히들 어떤 인구정책이나 가족정책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현재의 저출산은 어떠한 파급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다시 장래추계의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저출산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를 순차적으로 감소시켜 총인구 감소시대에 돌입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05년에는 924만 명으로, 향후에도 저출산 현상으로 감소세가 지속하면 2050년 376만 명(현 수준의 40% 수준)에 이른다. 총인구는 2018년의 4,934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림 3〉 연령별 인구구성과 고령화 수준: 1960-2050



저출산 시대에는 게임, 만화, 음악 CD 등 젊은이들을 위한 상품, 서비스가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대상의 만화나 잡지의 발행 부수나 음악 CD 판매 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소비 동향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주택 및 내구재 수요의 근본적인 감소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인구변동은 영유아·가임여성 용품 생산업체의 매출고, 보육시설·유치원 입학경쟁, 초중고교의 학령인구, 대학 입시경쟁, 대학의 통폐합, 군대의 징병

제도, 소비·생산시장과 연금·보험 지출 등의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마디로, 저출산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진입하게 된다. 금융과 투자, 산업과 기술, 소비와 시장, 사회와 문화가 대지진을 일으키게 된다.

저출산은 또한 노동공급의 감소를 가져온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의 3,619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242만 명으로 줄고, 생산연령인구의 비중

은 2016년의 73.4%를 정점으로 2050년에는 53.0%로 준다. 생산연령인구 중 25-49세의 인구는 2020년에는 1,808만 명, 2050년에는 996만 명으로 준다. 출생아수 감소는 신규 노동자의 감소를 가져와, 20년 후는 생활수준의 하락과 경제활동의 정체가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1960년대의 유럽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문화마찰, 사회계층 차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민은 1~3세대에 저출산의 라이프스타일에 동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 수용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5년 파리 교외 폭동에 많은 이민자들이 참가하여 전 세계의 다민족 국가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또 독일에서는 이민도 독일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쫓아서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이민 수용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의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노인인구(65세이상)는 2008년에 500만 명, 2026년에는 1,000만 명, 2040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선다. 2016년에는 노인인구(659만 명)가 유소년인구(650만 명)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고령화 수준은 2000년에 7%(고령화 사회)에 이르고,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는 20.8% (초 고령사회 진입), 2050년에는 38.2%로 상승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경험하는 현재, 미국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실업률이 20%에 육박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경제공황 당시의 2배에 이르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고령화의 급진전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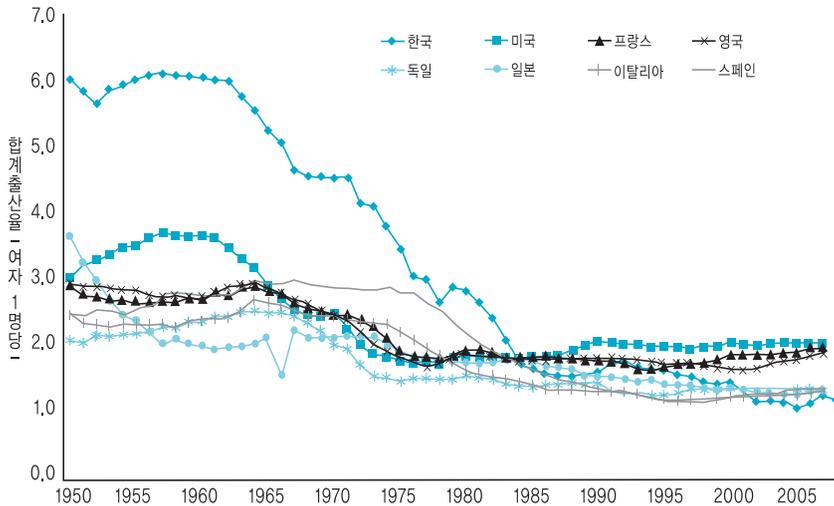
그러나 저출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높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통하여 인구밀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의 과밀해소는 땅값 하락,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사회는 노동과 자본의 통합을 전제로 하며, 도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는 한 인구감소는 농촌과 지방도시의 황폐를 초래할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한 인구밀도의 적정화는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전환시대에 사회보장 및 경제 등의 영역에서 피해자가 되는 샌드위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럽의 인구변천은 제2차 대전에 끝났지만,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6.0명으로 구미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높아서 인구폭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구미선진국은 완만히 하락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와 구미선진국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구미선진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경미하게 반전 혹은 현상을 유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그림 4〉 주요국의 출산율 동향: 1950-2008



미국과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대체수준 2.1명을 회복했으나, 다시 떨어졌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우생학이나 나치즘의 망령 때문에, 출산율 회복을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육아지원을 ‘아동·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다.

남유럽은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1명으로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에 적용되는 초저출산 체제(lowest-low fertility regime)의 선발주자가 되었다. 가톨릭의 보수적 가치관과 무슬리니의 파시즘적 인구이론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법 제도 개선과 새로운 가족정책이 마련되면서 출산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기는 하다.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에서는 계획적인 인구 억제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보육제도로 인

구대체수준인 2.1명을 유지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 구성국가 중에는 1980년대 이후 경제침체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발생,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는 국가도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초저출산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출산율은 약간씩 회복하고 있다. 일본도 출산력 회복을 위하여 신생아의 미래를 응원하는 강력한 정책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구상하였으며,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 내각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의 노력은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시장경제로 다시 진입하는 구 소비에트 국가나 동유럽의 국가들은 초저출산 체제의 함정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

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체제가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경제침체의 대혼란에 빠지면서, 자녀 양육은 값비싼 사치품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어떠한 저출산 대책도 그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경기회복과 일·육아의 양립 지원으로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젊은 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에, 총인구 중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고령자의 고용 확대 및 제도의 재설계에 따라 사회 보장 체제의 지속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이 음식 및 기저귀 등 유아용품 업계의 매출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신규수요 창출을 통하여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업은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는,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해결은 어렵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재구성야말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출산 극복의 해법으로 미국식과 프랑스식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이민국가나, 선진국 중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명을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모델에 대하여,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자유방임적 사회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이유로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나 노동시장의 이탈과 재진입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미국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4년 동안 경력을 중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신의 경력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프랑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제1차 대전 후 인구감소는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출산장려정책을 사회체제의 근간으로 만들었고, 1939년에는 가족법을 제정하여 모성 보호를 위한 방대한 재정투입을 실천하였다. 독일이 나치시대의 출산장려정책에서 후퇴하는 것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좌우정권 모두 출산장려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출산장려정책에는 양육비 직접지원, 조세 감면, 여행비나 박물관 입장료를 감면하는 “대가족 카드”를 포함한다. 현재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출산정책을 별도 실시하지 않는 영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양육비 지원이라는 가족정책 외에 여성의 취업확대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프랑스 여성의 경우 25~50세의 경우 80%가 취업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원 자체가 아이를 더 낳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리 큰 유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 중심적 취업모델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취업모형을 개발하고, 출산의 거대한 장애물인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후진국이었지만,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후진국이 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은 GDP의 2.0%에서 많게는 4.0%를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GDP의 0.4%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지급보다는 육아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취업, 교육, 사회보장을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무대책이 최고 대책이라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는 11월 25일에 새로마지 플랜(2006-2010)의 후속 판으로 새로운 저출산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여성에 편중된 육아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배려 등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나왔던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반복 나열하고 있는데다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전략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한 살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것이어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거나, 대학의 취학연수를 1년 줄이는 것은 교육정책으로도 문제가 지적되지만, 인구정책으로도 생애주기를 가속화하여 출산연령의 상승을 저지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베이비 보너스

제도를 전국수준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여성들이 들은 고사하고 하나 낳기도 어렵다는 세상에, 저출산 대책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수혜자로 하고 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족이 얼마나 되기에, 현재의 물량배정을 늘린다고 저출산 극복에 보탬이 되겠는가. 또 보육, 특히 민간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고, 4세 미만 자녀의 무상양육대상을 35만 명 수준에서 62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하나로 더 낳겠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당장은 없더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 집권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차세대를 육성하고,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을 축소하여, 서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는 예산을 4대 강에 투입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투입하여, 현 세대와 후세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인본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가 진정한 보수정당의 가치를 옹호한다면, 현재의 4대 사회보장제도에 어린아이를 하나라도 낳는 가족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바로 출산보장 제도를 창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오 유 석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1. 머리말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범여성계 연대조직으로 (2009년 11월 5일 발족) 새롭게 결성하고 여성들의 힘을 모아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의 성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여성조직들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배분방식 개선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2010 지방선거 선출직 30%여성할당에 관한 안건이 중앙위원회를 통과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번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참여와 관련하여 드러난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10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의 필요와 당위

1) 생활정치, 일상의 정치로서의 지역정치와 여성

흔히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라 ‘살림’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때 정치란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 중심-국가(중앙)중심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면

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해 왔다. 즉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 점이 중앙정치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주요사무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전업 지역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의 관심사(특히 전업주부들의)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 육아, 지역문화, 주거환경, 쓰레기 처리문제, 노동·교통 등 이러한 부분은 생활밀착형 문제들로서 그 현장성의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이 훌륭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에 기반한 정치력의 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쓰레기문제를 '남성의원' 들 특히 환경운동가 출신 남성의원들도 주요 의제로 다룰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쓰레기라는 '생활정치'의 소재를 다룰 뿐 실질적으로 쓰레기와 밀착된 여성의 생활을 주제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주제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에 기반한 정치력의 구성, 즉 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제의식의 출발이 자발적 동기를 형성하면서 정치력을 구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생활정치는 단지 소재가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로 특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은 보다 많은 지역 여성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여성들은 지방자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남성들의 장으로 성역화되어 있는 '정치' 영역에서 스스로 주체임을 선언하고 인정받으며 점차 여성의 숫적 대

표성뿐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최상의 길이다.

2) 새로운 정치와 여성

생활밀착형 정치는 곧 주민들이 지역의제를 만들기 때문에 '통치'가 아닌 '참여에 의한 자치'로 변화시키고, 형식적이거나 가시적인 것 보다는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어려운 주민을 우선 고려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새로운 정치'인 것이다. 새로운 정치란 이미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치적 실천으로 이루고 지고 있는 바 그 문제의식의 출발은 후기 물질주의시대에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에 있다. 즉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갈등들은 예전의 분배문제나 계급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정치의 주변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평화유지, 환경, 인권, 여성, 청소년 등의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제기되면서 정치의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치의 대명사격인 녹색문제-생태계의 평형파괴,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고갈, 에너지 보존 및 재생 등-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녹색정치'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발전이나 통합, 외교문제 등에 가려져 있던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이었지만 지금은 정치 안으로 들어와 주요한 의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개념인 낡은 정치(old politics)가 경제적, 사회적 보장과 사회 내부적, 군

사적 안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로운 정치는 삶의 질, 평등한 권리와 개인의 자아실현과 참여, 그리고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정치의 핵심이 국가나 사회전체에서 지역이나 개인차원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든스(Giddens)같은 학자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요구를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새로운 정치 주체를 요구한다. 기존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민들이-여성, 장애인, 이주자, 비정규노동자,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참여 정치의 주체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보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70-80% 이상이 24시간 지역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주체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성이야말로 생활 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경험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가 지향하는 대안들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지역정치

1991년에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치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20년이 되어가는 셈이다. 지방자치가 곧 참여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어렵사리 여성들이 지역정치에 참여 해온 세월이 이만큼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사무의 50% 이상이 여성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해 당사자로서 여성들의 요구를 전달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기존의 선거와 정당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정치 신인에 불과한 여성들이 넘어서기에는 너무도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점이고, 고질적인 선거정치문화-돈선거, 부정선거, 연고주의선거, 조직선거-가 여성들의 생애환경과는 체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며,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여성들조차도 아직 자녀출산과 양육의 역할 때문에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대다수 일반여성들은 아직도 정치를 낡은정치를 안에서만 인식하여 정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대로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정치에 참여해야할 필요와 당위는 명백하다. 지역주민의 진정한 주체로서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요구하는 가족문화,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정부패한 선거 및 정치문화, 여성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과감히 맞서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야 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계급, 계층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하면서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산실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중앙의 보편적, 획일적, 일반화된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산출한다. 따라서 구조적이고 큰 정치나 종합적인 정치적 이해력을 강조하는 중앙정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심하고 작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성장

이슈브리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수가 적고 선거비용도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짧은 준비기간에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지방의회로의 진출 과정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특히 상위 수준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기능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교육 기능도 병행될 수 있다. 설사 지방의회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저변, 특히 여성중심의 저변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

3. 5.31 지방선거 결과분석

1) 선거 결과 개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교하면 기초의회에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구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화와 맞물려 전체 당선인

수도 기초의회 선출직이 972명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선인 수가 543명 감소하였다. 5.31 지방선거는 더 이상 다른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하였으며, 광역의회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심판대로 몰고 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새롭게 도입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일정부분 이 같은 결과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 여성 당선 현황

(1) 성별 당선자 현황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경우, 전체 1,411명의 여성후보자가 출마하여 529명의 여성이 당선됨으로써 전체 3,867명의 당선자 중 13.6%를 차지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할 경우,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중선거구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성 당선자 비율이 5.78%로 종전의 3.4%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늘

〈표 1〉 5.31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 분	합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계	3,872	702	2,345	378	81	89	277	
시·도지사	16	1	12	2	-	-	1	
구·시·군의 장	230	19	155	20	-	7	29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3	519	71	5	13	14
	비례대표	78	19	38	9	10	2	-
	교육의원	5	-	-	-	-	-	5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543	1,40	1233	52	56	228
	비례대표	375	87	220	43	14	11	-

*주1: 교육의원은 무소속에 포함

어난 여성의 대부분이 강력한 여성계의 요구에 밀려 생색낸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50% 할당에 의한 숫자로, 여성운동을 통한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확대가 여전히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당 모두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였고, 한나라당 63.3%(305명

당선/480명 출마), 열린우리당 34.3%(122명/356명), 민주당 37.1%(46명/124명), 민주노동당 14.3%(40명/280명)의 여성후보가 당선하여 당선율 면에 있어서 전체 정당지지율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 역대 지방선거 여성참여현황

구 분		여성후보자수 (총 후보자수)	여성후보비율	여성당선자수 (총 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991	계	186(13,044)	1.4%	48(5,161)	0.9%	
	광역의회의원	63(2,885)	2.1%	8(858)	0.9%	
	기초의회의원	123(10,159)	1.81%	128(5,756)	2.2%	
1995	계	252(10,168)	1.81%	128(5,756)	2.2%	
	광역자치단체장	2(56)	3.5%	0(15)	0%	
	기초자치단체장	8(943)	4.2%	1(230)	0.4%	
	광역의회의원	40(2,449)	1.63%	13(690)	5.76%	
	기초의회의원	206(11,970)	1.72%	72(4,541)	1.58%	
1998	계	185(10,168)	1.81%	97(4,450)	2.17%	
	광역자치단체장	0(40)	0%	0	0%	
	기초자치단체장	8(667)	1.18%	0(230)	0	
	광역의회	지역구	37(1,571)	2.35%	14(602)	2.3%
		비례대표	54(180)	3%	27(47)	57.4%
	광역의회 합계	91(1,751)	5.2%	41(649)	5.9%	
	기초의회의원	140(7,754)	1.80%	56(3,490)	1.60%	
2002	계	394(10,870)	4.62%	142(4,439)	3.19%	
	광역자치단체장	0(40)	0%	0	0%	
	기초자치단체장	8(750)	1%	2(232)	0.86%	
	광역의회	지역구	48(1,531)	3.2%	14(609)	2.29%
		비례대표	116(209)	55.5%	49(73)	67.1%
	광역의회 합계	164(1,740)	9.4%	63(682)	9.2%	
	기초의회의원	222(7,450)	2.9%	77(2,485)	2.2%	

구 분		여성후보자수 (총 후보자수)	여성후보비율	여성당선자수 (총 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2006	계	1,411(12,213)	11.6%	529(3,867)	13.7%	
	광역자치단체장	4(66)	6.1%	0(16)	0%	
	기초자치단체장	23(848)	2.7%	3(230)	1.3%	
	광역 의회	지역구	107(2,068)	5.2%	32(655)	4.9%
		비례대표	136(211)	64.5%	57(78)	73.1%
	광역의회 합계	243(2,279)	10.7%	89(773)	12.1%	
	기초 의회	지역구	391(7,995)	4.9%	110(2,513)	4.4%
		비례대표	750(1,025)	73.2%	327(375)	87.2%
기초의회 합계	1141(9,020)	12.6%	437(2,888)	49.2%		

(2) 각급 선거별 여성당선 현황

각급 선거별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를 정당별로 구분해 보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경우 단체장에 한 명의 여성도 당선시키지 못했으며, 한나라당은 3명의 기초단체장(서울 송파, 대구 중구, 인천 중구)을 당선시켰다. 열린우리당은

광역의회의 경우에도 22명의 여성후보를 지역구로 공천하였으나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20% 여성 할당 강제를 당헌·당규상 명시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전체 후보자 중 34.9%(280명/802명)에 달하는 여성후보를 공천했으나,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낮아 총 40명의 여성만이 당선되었다.

〈표 3〉 5.31 지방선거 각급 선거별 여성참여현황

()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 총수

구 분		여성후보자수	여성후보비율	여성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계		1,411(12,213)	11.6%	529(3,867)	13.6%
광역단체장		4(66)	6.1%	0(16)	0%
기초단체장		23(848)	2.7%	3(230)	1.3%
광역	지역구	107(2,068)	5.2%	32(655)	4.9%
	비례	136(211)	64.5%	57(78)	73.1%
소계		243(2,279)	10.7%	89(733)	12.1%
기초	지역구	391(7,995)	4.9%	110(2,513)	4.4%
	비례	750(1,025)	73.2%	327(375)	87.2%
소계		1,141(9,020)	12.6%	437(2,888)	15.1%

4. 2010지방선거와 여성정치참여확대 전략

1) 여성후보 할당 강제를 넘어 남녀동수로

앞에서도 이미 2006년 5. 31지방선거에 새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통해 증가한 인원을 제외하면 여성당선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인 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출직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4~5%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은 준수했지만 선출직 여성할당 30% 권고는 거의 적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5.31 지방선거 각 정당별 여성후보 공천현황

괄호 안은 전체 공천 확정 후보 숫자

구 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광역단체장	1(16)	6.25	1(16)	6.25	0(8)	0	1(13)	7.69
기초단체장	7(230)	3.04	5(197)	2.54	1(90)	1.11	4(56)	7.14
광역비례	35(58)	60.34	42(65)	64.61	19(28)	67.9	26(42)	61.90
광역선출	22(521)	4.22	33(565)	5.84	10(235)	4.26	16(97)	16.49
기초비례	238(308)	78.24	309(430)	71.86	71(124)	57.25	107(127)	84.25
기초선출	53(1303)	4.07	90(1944)	4.63	23(749)	3.07	126(467)	26.98
합계	357(2436)	14.74	480(3217)	14.92	124(1234)	10.04	270(802)	34.91

특히 선출직 정당공천을 위한 당내후보선출과정을 살펴보면, 각 당이 겉으로는 여성후보우대나 전략공천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정당의 선출직 여성 공천 현황은 열린우리당 4%, 한나라당 4.7%, 민주당 3.2%에 그쳐 지방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후보 중 주요 4당의 여성후보자는 6.04%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역위원회별로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인 이상 출마 시 여성할당 20%강제조항을 당헌에 명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4.91%라는 여성공천 결과를 만들어냈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2010 지방선거 선출직 30%

여성할당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며, 여타 주요 정당에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계로서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선출직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 강행규정화>,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적인 확대 또는 정당명부제 도입(기초의회 우선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여성계는 ‘2010지방선거 남녀동수연대’ 구성을 통해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일정비율 요구를 넘어 당당히 ‘남녀동수’ 원칙을 주장하고자 한다.

2) 공천제도개선

5. 31 지방선거의 경우 각 당의 중앙당은 공천권의 분권화를 핑계로 상향식 공천제의 명분만을 앞세워 여성할당 이행과 전략공천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향후 여성의 선출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선출직 여성할당의 강행규정화와 함께 정당 내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유권자·여성,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다양한 소수자 등이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당장 폐지¹⁾할 수 없다면 후보공천이 해당 지역의 특정정치인에게 독점 되는 현행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3)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운동제한 등의 개선 및 폐지

5. 31지방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 반환 조항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제가 변경(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되었다는 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바뀌고 선거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조항을 하향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반환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선거비용관련

조항은 여성 및 무소속 등 정치신인들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자의 소액모금금지(국회의원은 가능) 및 호별방문 금지 등은 정치진입을 시도하는 신인에게 매우 불리하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개선을 통해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4) 정당 내 여성참여기반 구축 및 여성후보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여성정치발전비 및 선거보조금은 각 정당 내에서 입지가 약한 여성조직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적으로 여성후보자를 발굴·육성·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항목과 관련하여 아직도 여성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성정치발전비를 활용하여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당내 여성 당직자들의 정치력 및 지도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여성 당직자들에게는 각 급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여성정치참여확대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 제도의 경우도 그 지급기준이 기존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

¹⁾ 18대국회 들어 본격적으로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는 방식 및 이와 맞물려 비례대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서부터 기초의회의 경우 아예 당적보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정안이 있고, 그 외에도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개선논의를 좀더 확장해서 지역정당에 대한 허용을 전제로 기초의회를 전면적으로 정당명부제로 전환하자는 의견,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풀뿌리 생활정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동반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으로 상대적으로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이 더 높은 정당에게 적게 지급되는 결과를 낳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정당 소속 여성후보자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이나 여성정치발전비 및 선거보조금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무소속 여성후보의 경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선거비용과 공탁금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50개국 이상이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성할당의 취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기성 정당에 맡기기보다, 오히려 뜻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 한하여 공탁금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5) 2010지방선거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여성연대 구축

지역정치를 여성의 손으로 실현하고자하는 지역여성들은 정당공천제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서 같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자원을 네트워크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기반이 있어야 각 정당의 여성후보나 각 단체의 여성후보들이 선출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뿐 아니라 여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의 실질적 주인인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단체 및 활동가들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여성이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발굴되고 준비된 여성이 최종적으로 어느 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지역여성네트워크의 힘을

빌린 여성이 여성의원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 소속이 다른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도 가능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여성지방의원의 경우 정당을 불문하고 결국은 소수의원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소수의원으로서 겪게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지역 여성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적 가치, 생활정치적 가치,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최소주의에서 끝은 최대주의로 가는 것이 여성정치세력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최소주의를 통해 영향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5. 여성의 지역정치참여의 성과-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민선 5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는 희망적이다.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여성 및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관련한 조례를 더 많이 발의했고,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훨씬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었던 여성 비례대표의 경우 남성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남성의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여성관련 조례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원의 증가 영향으로

이슈브리프

남성위원의 성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경제, 건설, 행정, 정치 등의 의제보다도 새로운 정치, 생활정치의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 복지, 교육, 문화/예술, 치안 등과 관련된 의제의 발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보고에 의하면 지역의 주체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와 성과가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지역’과 ‘개인’이라는 한계에 갇혀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비록 소수이지만 지방의회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바꾸어 놓은 풍성하고 튼실한 지역정치사례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이 모든 결과는 민선 4기(2002년) 여성지방의원

들의 개별 의정사례 및 성과에 이어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역정치참여를 통해 그동안 주변적인 안건으로만 머물렀던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이슈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를 일구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적 정치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가 지역정치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 지역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2010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지방의원 배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김원홍, 2009, '2010 지방선거와 여성참여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58차 여성정책포럼

3)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7, '여성지방의원 의정 사례집', 자료집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김 영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¹⁾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자료, 2009)²⁾.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다.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이며,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의 여성 자살률에 비해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09)³⁾.

‘여성의 자살에 관한 비평적 고찰’⁴⁾이라는 논문은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성 자살에 관한 연구가 남성 자살에 대한 연구보다 적었으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율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므로 여성 자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해주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2007)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자살 생각은 21.1%인 4,400,508 명이 경험하며 총 자살 생각자 6,419,990 중 68.5%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 중 자살 생각은 9.6%인 2,019,482 명이며 총 자살 생각자 중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 생각을 경험한 여성 중 5.8%인 257,019명이 자살을 시도하며 총 337,462명의 자살시도 경험자 중 여성이 76.2%를 차지한 반면에 자살 생각을 경험한 남성 중 4.0%인 80,443명이 자살 시도를 경험하며 총 자살 시도자

1) 본 원고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 영택 외, 예서 부문 인용되었음. 이 보고서는 2010년 출판될 예정이다.

2) 통계청 <http://www.nso.go.k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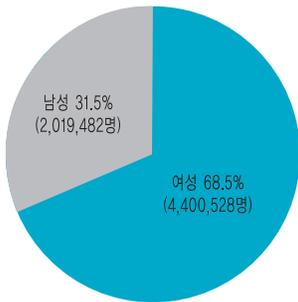
3) OECD, 2009, Health Data 2008

4) Chaudron et al. 2004. "Suicide among women: Critical Review", JAMWA, 59. :125-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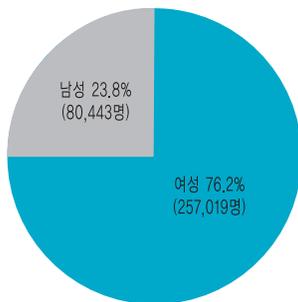
이슈브리프

중 23.8%를 차지하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림 1〉 성별 자살 생각자 비율



〈그림 2〉 성별 자살 시도자 비율



여성 자살의 증가 추세에 대한 밑바탕에는 이러한 자살 생각(충동) 및 자살 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대처 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살 생각이 반드시 자살 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살 생각이 자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의 출발점이며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를 유발하며 자살로

이끌어진다는 연속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빈번한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로 이루어지고 빈번한 자살 시도는 자살 미수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살로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생각의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맞춤형의 자살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여성의 자살 예방정책에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 중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고위험군 집단

자살 생각의 고위험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2007)를 분석한 결과⁵⁾를 살펴보면, 여성 중 19세 이하는 26%(626,786명), 20세 이상 - 59세 이하는 15.9%(2,309,444명), 60세 이상은 37.8%(1,464,279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혼인상태별 따른 자살생각을 보면, 결혼한 여성 중 15.9%(2,006,975명), 별거/이혼/사별을 한 여성은 39.8%(1,318,910명), 미혼인 여성은 22.7%(1,054,808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응답했다. 가구 소득사분위수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여성은 전체 중 34.1%(1,119,104명)가 자살생각을 하고 2분위는 26.7%(1,335,032명), 3분위는 13.6%(805,301명),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인 4분위 여성은 14.7%(810,013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형태를 보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은 14.7%(1,051,156명), 비정규직은 24%(505,961명),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24.6%(1,982,011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응답

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중치 변수를 활용하였음.

했다.

다음으로 건강변수 중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여성들의 자살생각을 보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라고 응답한 여성들 중 자살생각을 하는 여성은 17.2%(112,715명), '좋다' 라고 응답한 여성 중 15.3%(859,200명), '보통' 이라고 응답한 여성 중 16.9%(1,756,933명), '나쁘다' 라고 응답한 여성 34.7%(1,156,989명),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여성 중 66.3%(514,672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주간 몸이 아픈 경험(질병이환)이 있는 여성은 35.0%(1,481,274명)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반면에 질병이환이 없는 여성은 17.7%(2,919,234명)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2주 이상 연속 우울함을 느낀 여성은 64.3%(2,339,824명)가 자살생각을 한 반면에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여성 중 12.0%(2,660,685명)만이 자살생각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인지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 여부를 볼 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여성'은 59.8%(827,808명), '많이 느끼는 편인 여성'은 33.6%(1,679,888명), '조금 느끼는 편인 여성'은 13.2%(1,476,647명), '거의 느끼지 않는 여성'은 12.8%(416,166명)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를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전체 중 5.4%(34,136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으며 20세 이상 - 59세 이하의 5.9%(133,642명), 60세 이상은 6.7%(89,242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또한 혼인상태별 따른 자살시도를 보면, 결혼한 여성은 전체 중 5.1%(97,619명), 별거/이혼/사별을 한 여성은 8.2%(102,723명), 미혼인 여성은 4.9%

(52,061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가구 소득사분위수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여성은 전체 중 7.3%(76,513명)가 자살시도를 해봤으며 2분위는 6.2%(81,558명), 3분위는 5.7%(46,013명), 가장 소득이 높은 4분위 여성은 2.2%(16,646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직장형태를 보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은 8.6%(89,358명), 비정규직은 1.7%(8,173명),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6.5%(120,410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건강변수 중 여성의 건강상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여성들의 자살시도를 보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라고 응답한 여성들 중 자살시도를 해봤던 여성은 6.8%(7,027명), '좋다' 라고 응답한 여성 중 1.2%(10,240명), '보통' 이라고 응답한 여성 중 5.3%(89,780명), '나쁘다' 라고 응답한 여성 34.7%(1,156,989명),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여성 중 6.1%(29,407명)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또한 2주간 몸이 아픈 경험(질병이환)이 있는 여성은 10.6%(151,612명)가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한 반면에 질병이환이 없는 여성은 3.8%(105,407명)가 자살 시도를 하였다.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을 느낀 여성은 7.0%(160,204명)가 자살시도를 한 반면에 우울감이 없는 여성 중 4.9%(96,816명)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인지의 정도에 따라 자살시도 여부를 볼 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여성'은 13.3%(108,766명), '많이 느끼는 편인 여성'은 7.8%(124,866명), '조금 느끼는 편인 여성'은 1.6%(23,387명)가 자살시도를 해봤고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인 여성'은 모두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별거/이혼/사별을 경험할수록,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2주 연속 우울감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자살 생각면에서는 정규직 보다 높지만 자살 시도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높다. 정규직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내 지지망 혹은 또래 상담자의 돌봄과 조력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해소방안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인 경우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결과 앞에서 언급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증이 여성의 자살 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인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결과 지역별 여성 실업자 수 및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 수가 지역적으로 상이한 스트레스 수준과 연관되며 이는 결국 여성의 자살생각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근본적인 방안임을 암시한다.

여성자살 예방정책 방안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

는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여성 특이적인 자살 예방 방안은 가족 단위의 여성 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자살원인은 정신건강문제와 가족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살예방방안은 가족단위의 여성 생활과 관련된 고통 해결 방안,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방안, 일·가정 양립의 부담 해소 방안, 외로움·고독 극복을 위한 여성 특이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 향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살 예방을 위한 여성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신건강 증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신건강, 즉 우울증이 자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여성들의 정신건강증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우울증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가검진 시스템 구축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 생활 공간에서 우울증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예로, 인터넷 상으로 우울증자가검진이 가능하게 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여성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산모인 경우 산전, 임신 중, 산후시기에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와 인근지역 산부인과 간 MOU 체결 통해 산전 후 우울증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산전 후 우울증의 의식적, 무의식적 축적은 이후 40, 50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예방강좌 등 특정시기에 집중관리가 요

청된다.

세 번째로,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주요한 시기에 인생주기와 발달과업, 가족 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돕는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일정 연령 혹은 상황에서 예비부모-부모교육, 임신, 태교, 신생아 양육, 변화하는 부부관계 대처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교육반도록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 국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활용해 각 시기 별로 자살위험성을 점검하고 자살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상담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차이를 고려하는 자살예방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⁶⁾.

〈표 1〉 생애주기별 심리 및 여성자살 정책개선 방안

대 상	배 경	여성 자살정책 개선방안
청소년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경우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적인 욕구 혹은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여성청소년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2.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더 과도한 감독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이나 편견도 존재하는 바, 이들의 불안정함이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3. 청소년여성의 자살시도는 청소년남성의 자살시도와는 다른 메시지의 표현 일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적 혹은 통계적으로도 청소년여성은 청소년남성에 비해 비치명적인 자살수단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여성의 자살시도는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간접한 메시지일 수도 있음. 4. 청소년여성의 자살은 관계문제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여성은 부모의 부재나 돌봄, 교사나 친구의 관심 등의 관계적 특징을 가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인 청소년여성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훈련이나 관계 증진 훈련, 자기표현 훈련 등이 특별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2. 부모교육이나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성적으로 평등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 필요. 3. 청소년여성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이들의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부모와 형제, 친구, 교사에 대해 자살생각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와 조력과 돌봄의 방법을 교육하여 자살을 예방. 4.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사전 screening 등 청소년여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담교육, 특히, 청소년여성에게 유익미 타자가 되는 이들이 게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

6) 자살 방지 정책방안 마련 관련 세미나(2009). 이윤주 원고 부문 인용 및 재구성

〈표 2〉 생애주기별 심리 및 여성자살 정책개선 방안

대 상	배 경	여성 자살정책 개선방안
성인여성	<p>1.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자살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 순위와 양상에 있어서 상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주부의 경우 과도한 업무와 부담감,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 지지망 활용의 여유 부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됨. -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함. <p>2. 성인 여성의 자살의 원인 중 우울감에 관해 면밀한 탐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기 여성은 생리적 특성과 생리적 변화(폐경, 갱년기 등), 더 낮은 경제적 지위, 가정주부라는 가족 내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우울감을 가중 시킴. - 한국사회에서 의존적, 수동적으로 살아온 중년 여성은 남편의 사회적 성공과 대비되는 자신의 폐경과 늙어감, 자녀들의 떠나감으로 인한 빈둥지증후군을 겪으며 가치감 저하, 삶의 중심 방향과 목적 상실, 자기부정적인 부정적감 등으로 깊은 우울감에 시달림. 	<p>1.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내 지지망 혹은 또래 상담자의 돌봄과 조력,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외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됨.</p> <p>2. 중년여성들이 겪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또래지집단의 형성, 중년기 이후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 등이 필요.</p>
노인여성	<p>1.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 노인에게 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작용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화병으로 대표되는 신체화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리며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열악함. -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평생 해 오던 역할을 상실할 때 이러한 역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온 여성노인의 상실감과 무가치감은 극대화되기 쉽고 이는 심한 우울감을 가져와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하도록 영향을 줌. <p>2. 노인의 열등감과 우울감, 절망감을 가져오고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노인학대의 주 피해자는 여성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층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개인적 차원에 맡겨두기 보다는 사회보장 제도로 해결. - 노인케어 등 노인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교육에서 이러한 여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교육, 적절히 공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육을 포함.

나가며

최근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기조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적 성차에 주목하여 여성의 심신 증상을 연구하는 ‘성차 의료’를 확충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심신 증상을 연구하는 ‘성차 의료’ 확충은 성의학 측면에서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안이 성별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예방 및 치료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자살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자살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 대하여 성차를 고려하는 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뉴스 분석과 미디어의 역할

정의철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뉴스미디어는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현실에 대한 권위적 버전(an authoritative version of reality)으로 기능하며 특정한 목소리를 전파한다(Kenix, 2008). 다문화와 이주민 문제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재현은 이주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여론과 이민정책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Bauder, 2008). 뉴스미디어는 시민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인종(민족)주의 등 집단적 상상력을 형성·유지하는 핵심 정보원이며 다문화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메시지와 담론을 전파해 민족(국가)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디어의 메시지는 다문화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룹들에게 "포함과 참여" 및 "배제와 주변화"를 부여하는 인식의 틀로도 기능한다(Silverstone & Georgiou, 2005).

다문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Banks, 2008).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환경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미디어의 교육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박창희·정희경·김미경·안재현, 2008. 12). 미디어는 다른 문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며, 특히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기표현과 연대를 통한 자기강화(self-empowerment)의 공간을 제공한다(Golding & Murdock, 1991). 또한,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은 이주민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특정한 관점을 형성해 시민의 다문화 의식에 긍·부정적 영향을 준다(Burke, 2002). 즉, 미디어는 이주민에 관한 주제를

의제화 및 문제화(problematization)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언어와 담론의 틀인 프레임(discursive frame)을 구성한다. 이 프레임을 통해 다문화 이슈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Hier & Greenberg, 2002). 이러한 미디어(대중매체)의 의제설정 및 문제정의와 프레임링 기능을 감안할 때 미디어가 다문화사회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강력한 의제설정의 힘을 가진 공중파 방송사의 다문화 관련 뉴스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미디어의 역할과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다문화 민감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뉴스

다문화 현상은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이동과 함께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결과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외국인근로자가 575,657명,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60.3%, 동남아시아 24.3%, 남부아시아 5.7%, 중앙아시아 2.4%, 몽골 2.3% 순이다. 결혼이민자도 중국이 54.8%, 동남아시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시아 1.5%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적이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7). 다문화 사회가 양적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한국사회

와 문화에 흡수·통합하려는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즉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만 집중했지 시민의 다문화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 증진과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사회통합 노력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다문화에 관한 이미지와 여론 및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중파 방송뉴스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보도 방향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3대 공중파 방송의 저녁 뉴스에 나타나는 다문화 뉴스의 내용과 프레임에 대해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뉴스가 다루는 대상, 뉴스정보원, 뉴스처리방식, 뉴스논조, 정보/의견지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뉴스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뉴스프레임을 도출하고 이 프레임이 가지는 상징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다.

3. 연구결과: 다문화 뉴스와 프레임링

2007년 1월에서 2009년 8월까지 KBS, MBC, SBS의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문제를 다룬 뉴스 147건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방송사 별 뉴스의 수는 KBS(55개), MBC(45개), SBS(47개)이다.

1) 다문화 뉴스내용 분석

뉴스대상은 이주노동자(30.6%), 전체이주민(23.1%), 중국동포(22.4%), 결혼이주여성(17.0%), 다문화가정아동(6.8%) 순으로 선택되었다. 시기에 따라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가 늘고 있는 반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는 줄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 문제 전반에 대해 뉴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정보원으로는 이주민(44.9%), 일반인(시민)(14.5%), 인권단체(11.5%), 법집행기관(7.3%), 여타정부기관(6.4%)의 순이었다. 법집행기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인권단체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 뉴스 구성 시 인권차원의 관점과 목소리가 점점 더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뉴스처리방식에서는 현상에 집중하는 일화적 방식(74.8%)이 이슈와 맥락에 집중하는 주제적 방식(25.2%)보다 많았다. 이는 뉴스가 다문화와 이주민 문제의 맥락과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건에 치중함을 보여준다.

뉴스논조는 동정적(40.8%), 중립적(25.9%), 비판적(24.5%), 부정적(8.8%) 논조 순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비중과 위치가 아직 낮기 때문에 동정적 논조와 함께 정부의 이주민 정책(부재)에 대해 비판적 논조가 많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뉴스에서는 동정적 논조가 줄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증가하고 있었다. 다문화 뉴스에서는 의견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지향(20.4%)보다는 정보전달(79.6%)에 치중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는 미디어가 이주민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주제적 뉴스처리 패턴과 의견지향 뉴스가 함께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2) 다문화 뉴스프레임 분석

뉴스프레임은 어떤 이슈가 어떻게 토론될 지, 어떤 주제가 배제될 지에 대한 담론의 경계를 형성하며 특정한 관점을 가진 이야기 구조를 구성한다(Higgins, Naylor, Berry, O'Connor, & Mclean, 2006). 프레임은 사회·경제적 구조와도 연결되는데 특정 세력이 프레임에 개입해 특정 문제에 대한 그들의 선호된 정의를 후원함으로써 이슈나 갈등을 정의하기도 한다(Carragee & Roefs, 2004).¹⁾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뉴스에 나타나는 일곱 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이 중 인도주의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35.4%)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의 관행에 대해 인권차원으로 조명하는 뉴스프레임이다.

미담행사프레임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24.5%), 이주민과 관련된 감동적 이야기, 성공스토리 등 미담을 주제로 하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동화하고, 성공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와 다른 "그들"에 대한 묘사가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정책프레임(11.6%)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문제나 절차를 주로 다루고, 교육프레임(7.5%)은 이주민 자녀 교육 등 다문화 가정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에 집중한다.

교육프레임은 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학교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프레임이다. 위협프레임은 이주민을 불법이나 위협이라는 담론의 틀 속에서 잠재적인 두려움

1) 뉴스프레임은 문제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일련의 주장으로 구성되며 상징, 은유, 케치프레이즈,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다(Menashe & Siegel, 1998).

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프레임이며 경제주의프레임은 경제적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이주민을 묘사하는데 이 두 프레임은 비중이 높지 않았다(위협프레임: 12.2%, 경제주의프레임: 4.8%). 경향프레임(4.1%)은 다문화와 이주민과 관련된 현상이나 통계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프레임이다.

다문화 뉴스 프레임 분석의 큰 특징은 인도주의프레임(2007: 40.7% → 2009: 21.6%)과 미담행사프레임(2007: 20.4% → 2009: 16.2%)의 비중이 줄고, 정책프레임(11.1% → 18.9%)과 교육프레임(5.6% → 16.2%)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뉴스만 볼 때 정책프레임이 미담행사프레임보다 더 많은데 이는 다문화와 이주민 주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교육프레임의 증가는 이주민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 문제가 심각해지고 미디어의 관심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프레임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교육적 역할보다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법원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적·법적 조치 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도 보여준다. 또한, 서구에서 지배적프레임의 하나였던 경제주의프레임이 증가하고 있는데(1.9% → 8.1%) 이는 이주민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프레임의 시기별 변화는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주제적 뉴스처리 및 비판적 논조와 의견지향 뉴스의 증가와도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주의 및 미담행사라는 두 개의 지배적 프레임을 가진 공중파 방송뉴스에서는 이민자는 불법이며, 잠재적 범죄자이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인종주의적 상상력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 방송 뉴스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미디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인종주의와 경계를 바탕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집단적 문제화와 부정적 재현이 많지 않았다. 이는 우선 이주민이 숫자상 "위협적"이지 않고 아직 캐나다 등의 중국이민자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해 위협적 존재로 부상했다고 볼 수 없음에 기인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경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농어촌지역의 결혼/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1990년대 초까지 이민자의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보도가 동정적이었던(Benson, 2002) 프랑스의 사례와도 상통한다.

뉴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외부 사건에 따라 사후반응적으로 프레임링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뉴스는 정책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데 이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많은 다문화 관련법과 제도가 논의되고 시행되었음에도 이슈중심의 뉴스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디어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인종(민족)주의를 외면 또는 부인하면서 이주민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국미디어가 "인종이 없다"라는 지배적인 다원주의 담론

∴ 이슈브리프

을 확산해(Pitcher, 2006) 인종주의적 현실을 부인하는 프레임 전략을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외면 또는 부인"의 프레임전략은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체불임금, 감금과 추방, 고정관념 등 명백하게 존재하는 인종(민족)주의에 근거한 차별을 지속시키고,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신화 속에 뿌리박혀 있는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뉴스의 인종주의 부인 전략은 공중의 인식 속에, 또 사회적 관행 속에 잠재되어있고 실제 작동하는 인종(민족)주의를 억제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피하고 "하나의 한국"이라는 동질적 국가(또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미디어가 암묵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결론: 다문화 사회와 미디어의 역할

이주민의 인종이나 국가적 배경에 따른 이중잣대(double standard)가 여전하며 특히 동남아 출신이나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미디어가 동정적, 중립적, 일화적 보도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 시민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보도패턴은 시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문제가 없으며 이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타인(Others)으로 바라보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다(Burke, 2002). 우리보다 다문화 사회를 빨리 경험한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뉴스프레임이 인종/민족그룹 간 불신과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주민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순간 미디어가

언제든지 위협, 경제주의 또는 문화프레임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타자화", "문제화", "범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미디어는 이주민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프레임에서 탈피해 이주민을 "우리(Us)"로 보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중심으로 뉴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뉴스미디어는 다문화교육과 다문화민감성 증진을 위해서 이주민 문제를 맥락과 구조 중심으로 보도하고 고정관념과 차별을 허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뉴스를 포함한 이주민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대로 읽기와 모니터링 능력 배양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교육) 캠페인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주민 뉴스를 올바르게,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잠재적 갈등요인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의 다문화민감성 증진을 위한 교육 체계 수립과 정부의 다문화 콘텐츠 심의규정 마련 및 언론사 자체 다문화 뉴스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다문화 뉴스가 현장 취재와 전문가 분석 및 맥락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심층·기획 보도를 늘리도록 각 언론사에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문화 관련 취재와 기획·심층 보도의 경우 공중과 방송이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심도있는 취재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층·기획보도 활성화와 공동취재단 운영은 부정적 사건이나 현상에 치중하는 일화적 보도, 사후반응적 보도와 행사 중심으로 다문화 뉴스가 구성되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민의 다문화 민감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을 위해서는 미디어, 정부, 시민, 이주민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형 규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뉴스를 포함한 다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와 이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시민, 콘텐츠가 다루는 주 대상인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가 함께 다문화민감성이 높은 텍스트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참여를 통해 시민의 다문화 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미디어콘텐츠 심의를 통해 인종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규제하는 한편,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을 지원하는 "적극적 의미의 내용규제"도 필요하다. 언론사는 자체적인 다문화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내부적으로 뉴스를 포함한 다문화콘텐츠 제작 방향을 세우고, 특히 뉴스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다문화 뉴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NGO 그룹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다문화콘텐츠 모니터링과 비평을 통해 건전한 다문화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겠다.

참 · 고 · 문 · 헌

- 박창희 · 정화경 · 김미경 · 안재현(2008, 12). 국내거주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조영환(2007).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과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226-261쪽). 서울: 동녘.
- 행정안전부(2009, 7).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홍숙영(2007). 외국인에 관한 TV 담론과 다문화주의. 『프랑스문화에 술연구』, 제22집, 1-20.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ition. 모경환 · 최충욱 · 김명정 · 임정수(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Bauder, H. (2008a). Immigration debate in Canada: How newspapers reported, 1996-2004. *Int. Migration & Integration*, 9, 289-310.
- Bauder, H. (2008b). Media discourse and the new German immigration law.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 95-112.
- Benson, R. (2002). The political/literary model of French journalism: Change and continuity in immigration news coverage, 1973-1991. *Journal of European Area Studies*, 10, 49-72.
- Burke, R. (2002). Invitation or invasion?: The family home metaphor in the Australian media's construction of immigra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3, 59-72.
- Carragee, K. M,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 214-233.
- Golding, P., & Murdock, G. (1991). Culture,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econom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mediaandsociety*(pp.15-32). London: Routledge.
- Hier, S. P., & Greenberg, J. L. (2002). Constructing a discursive crisis: Risk, problematization and illegal Chinese in Canada. *Ethnic and Racial Studies*, 25, 490-513.
- Higgins, J. W., Naylor, P. J., Berry, T., O'Connor, B., & Mclean, D. (2006). The health buck stops where? Thematic framing of health discourse to understand the context for CVD preven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343-358.
- Kenix, L. J. (2008). From media frame to social change?: A comparative analysis of same-sex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Press. *Austral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5, 105-128.
- Meyrowitz, J., & Maguire, J. (1993). Media, place, and multiculturalism. *American Culture*, 41-48.
- O' Doherty, K., & Lecouteur, A. (2007). "Asylum seekers," "boat people" and "illegal immigrants" Social categorization in the media. *Asian Journal of Psychology*, 59, 1-12.
- Pitcher, B. (2006). "Are you thinking what we're thinking?":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disavowal of racism in the run-up to the 2005 British general election. *Social Semiotics*, 16, 535-551.
- Silverstone, R., & Georgiou, R. (2005). Editorial Introduction: Media and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 433-441.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 강한 여성, 약한 남자?

정 영 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¹⁾

1. 드라마 속 여성이미지

최근 몇 년 동안 시청률이 높았던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서사의 면에서 권선징악 이데올로기가 약해졌고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보다 큰 변화는 남녀 주인공의 성 이미지 및 역할이 변화한 것이다. 때로는 성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언뜻 보면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 장르로 안착한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TV속 여성이미지가 변한 듯 보인다. 실상 2009년 현재 '안방극장'을 주름잡는 여성은 '미실'과 '선덕여왕' 같은 강력한 군주이거나 '구은재'와 '주아란' 같은 강한 여성이다. 이들에게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드라마 속 여성 이미지를 논하면서 오랫동안 비판해온 희생적이고 순종적이며, 운명주의적인 수동적 여성 이미지를 발견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처럼 TV속 여성이미지는 정말로 변한 것일까?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와 여성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젠더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와 여성에 관한 최초의 글인 남명자(1984)의 논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젠더연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적 시각에서 재구성된 이상화된 여성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²⁾

1) yeongsol@hanmail.net

2) 1970~1983년까지 방영된 주요 인기 드라마를 분석한 남명자(1984)의 연구에 의하면, 시대적 상황과 갈등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표상되는 여성 이미지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현모양처적인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95쪽). 그 후 10여년이 지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명혜·김훈순(1996, 232쪽)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가정과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여성 이미지를 재현해오고 있음을 밝혔다(정영희, 2007, 42쪽).

또한 여성을 약하고 수동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표상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성을 가부장제의 틀 속에 가두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기능한다고 비판받아왔다.

이러한 학문적 평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그러한 주장이 수그러든 듯하다. 그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제력을 갖춘 여성 시청자가 증가했고, 그들의 여성주의적 관심과 요구를 텔레비전이 인식하면서 드라마에서 여성의 이미지와 성역할이 전통적인 구도를 벗어난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결정론을 따르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설명력을 잃으면서, 한국에서 텍스트에 대한 저항적 해독과 수용자의 능동적 소비에 관한 이론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변화는 없고 외연적 차원에서만 가부장적 질서 전복의 기호로 가득 찬 텔레비전 드라마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시대 변화, 여성이미지의 변화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이 비판하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이미지의 전형은 197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다. 1970년 <아씨>(TBC)와 그 뒤를 이은 <여로>(1972, KBS), <새엄마>³⁾(1972, MBC)의 성공 때문이다. <아씨>가 방영되기 이전에는 시청자들이 일일극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다. 1963년 텔레비전 광고가 허용되면서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시청자

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일연속극을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도 일일극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여로>로 공전의 히트를 경험한 제작자들과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가 일일극으로 재편되었고 유사한 여주인공의 전통을 만들어내었다. <아씨>로 인해 TBC는 1969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일연속극 부분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했고, 덕분에 일일연속극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다. <아씨>의 인기는 자기희생으로 일관해 온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운명에 시청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동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기를 경험한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후 ‘눈물짜기’ 소재 개발에 주력했으며 여성 취향의 멜로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정영희, 2005). 이들 드라마의 성공으로 인해 전체를 위해 순응하고 희생하며 인내하는 여성 이미지가 드라마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러한 여주인공 이미지가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을 대표하게 되었다. 1976년 문공부의 통일편성 방침에 따라 드라마 편성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멜로성 드라마가 주말로 옮겨지고 드라마가 일일극과 주말극으로 양분되었지만 방송3사 모두 공통적으로 사랑과 배신, 가정의 부흥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누이·며느리의 인내 등을 주제로 드라마를 생산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출세욕과 소유욕이 강한 팜프파탈 이미지도 간간히 등장했지만, 그들은 ‘착한 여자’의 인격과 품성을 받혀주는 조연으로서 의미가 한정되었다.

1980년대는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에 따라서 드

3) 후회로 들어간 새엄마가 시누이와 시동생들의 냉대 속에서 꾸준히 참고 견디며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설정의 드라마로 1972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일일연속극으로 최장기 방송되었으며(총 411회), 제 1회 문공부방송대상극본상 수상하였다.

∴ 이슈브리프

라마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일일연속극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형·특집극을 권장했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온 민족정신이나 선조의 얼을 기리고 함양할 수 있는 소재를 권장했다. 사극을 제외한 드라마에서도 <엄마의 일기>(1982, KBS)처럼 도시 서민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소재로 알뜰한 주부의 모습이나 소시민적 윤리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많았다. 혹은 <간난이>(1983, MBC) 같이 어려운 역사를 인내와 끈기로 헤쳐 나온 여성들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그러한 드라마 이외에도 당시 시청률 70%이상을 기록한 <사랑과 진실>(1984, MBC)은 선과 악의 명확한 대결구도에서 '착한 여성'은 남성에게 구원받고 '악한 여성'은 처벌받는다는 전형적인 선택과 배제의 틀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했다. 1980년대의 드라마가 구현한 이상적인 여성상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현명한 여성, 알뜰한 주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의 드라마가 그 전형성을 벗어나는 약간의 징조가 보였다. 더 이상 울고 짜는 여성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 가벼워진 여성 이미지 즉 발랄, 명랑, 혹은 청순한 여성이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어진 권위주의가 끝나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성격은 이미 많이 변해있었다. 사회전반에서 새로운 세대가 강력한 목소리로 제 몫을 요구하면서 드라마에서도 4, 50대 기성세대와 부상하는 젊은층의 문화가 공존하면서 드라마 시장도 세분화되어 갔다.⁴⁾ 특히 신세대를 겨냥한 트렌디드라마가 각광받으면서 '캔디렐라'가 양산되었다. 젊은이의 사랑놀이라는 가벼운 주제를 가벼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트렌디드라마는 발랄, 명랑, 청순한 여성(연인) 이미지를 유행시켰고 1990년대 중반이후 10여 년 간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표적인 여성 이미지가 되었다. <질투>나 <사랑을 그대 품안에> 등은 기존의 정통드라마와 경쟁하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밝고 경쾌한 트렌디드라마에서 다시 멜로드라마로 전환되면서 <가을동화>(2000, KBS), <겨울연가>(2002, KBS)가 인기를 얻었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추구하는 청순한 여성'이 한동안 TV화면을 지배했다. '순수하며 해맑은 청순한 여성'은 1990년대 남성들의 이상적인 연인상이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드라마는 서서히 '강한 여성'을 표상하기 시작했다. 1994년 <종합병원>에서 보여진 중성적 여성을 지나서, 2000년대 여성은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 적어도 드라마는 그렇게 보여준다. 가정에서는 남편보다 목소리 큰 아내, 아버지보다 결정력이 강한 어머니, 할말 다하는 며느리가 대세이며, 남친을 리드하고 직장에서 남성동료 위에 군림하기도 한다.

3. 강한 여성, 약한 남자?

그러한 변화의 시작은 아마도 <종합병원>이었을 것이다.⁵⁾ 머슴에 같은 여주인공에 뒤이어 2005년에는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거칠고 드세며, 성적 욕구표현에도 거침없는 여주인공이 등장했다. 그녀는 술과 담배도 즐긴다. 욕설과 비어도 어색하지 않고 연상이라는 이유로 남자를 애 다루듯 한다. <내 이름

4) 기성세대에게는 <마포무지개>(1992, MBC), <한명회>(1994, KBS), <달부짓집>(1994, KBS), <장복수>(1995, KBS), <장희빈>(1995, SBS), <옥이 이모>(1995, SBS), <옥남매>(1998, MBC) 등이 인기가 높았으며, 젊은 세대는 <두려움없는 사랑>(1992, SBS), <질투>(1992, MBC), <결어서 하늘까지>(1993, MBC), <마지막 승부>(1994, MBC), <사랑을 그대 품안에>(1994, MBC), <종합병원>(1994, MBC), <별은 내 가슴에>(1997, MBC) 등에 열광했다.

은 김삼순)은 종영시 53%(TNS미디어코리아,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보이며 그 해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신데렐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드라마와 다르게 인식되었으며, 나아가 여성주의 드라마의 일면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캐릭터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았고, 일과 사랑에서 여성의 선택과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성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여주인공 등으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복원된 듯한 인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가부장적 질서와 상충하는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수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 기존 여주인공과 구별되는 캐릭터 특성(거친 말투와 욕설, 과격한 언동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수용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논쟁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⁵⁾ 이는 반가부장적 기표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어떠한 정치적 실천의지도 내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 우리의 드라마는 군주 아니면 악녀로 대표되는 강한 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천추태후>(KBS), <선덕여왕>(MBC)에서 여성은 더 이상 남성(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와 술수를 일삼는 인물이 아니다. 기존의 드라마가 장희빈, 장녹수, 정난정을 소재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여성 간의 암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덕여왕>은 '미실'과 '덕만'을 두 축으로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 두 여주인공은 여성이 아니라 세주 혹은 군주로서 휘하를

다스리며 갈등의 중심에 있다. <아내의 유혹>(2008, SBS)에서 '구은재'는 순종적이고 인내하며 희생적인 여성으로서 보다는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서 존재감을 형성했다. 대립인물 '신애리' 또한 어리석고 교활한 남성(정교빈)을 자신의 욕망대로 조종하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천만번 사랑해>(2009, SBS)의 '고은남', <천사의 유혹>(2009, SBS)의 '윤재희' 같은 전형적인 여성이 있지만 시청자들은 그들이 답답하다. '주아란'의 복수에 더 공감하며 그 슬픔에 동화된다. 이는 일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와 TV드라마가 너무나 오랫동안 강요해온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TV드라마 속 어머니도 달라졌다. 드라마는 과거와는 다른 어머니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인내하고 희생적이며 모성이 강한 어머니에서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강한 어머니로 변했다. 2000년대 후반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가족 이기주의를 대표한다. 아침드라마 <망설이지마>(2009, SBS)에서 '민영'의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극구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의 여자친구 '수현'에게 '네 간이 필요해'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는다. '수현'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아들과 떼어 놓기 위해 그대로 이민을 가버린다. <아내가 돌아왔다>(2009, SBS)에서의 시어머니도 <천만번 사랑해>(2009, SBS)에서의 '세훈'의 어머니도 모두 가족을 위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계약과 음모를 꾸미는 어머니들이다. 모두 고학력에 능력있는 여성들이다.

5) 김응숙(1995)은 <종합병원>에는 가부장적 관념의 여성상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관념이 내면화한 여성다움의 틀에 갇혀있어서 유사 페미니즘(pseudo-feminism)을 보여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드라마가 페미니즘과 해방적 메시지를 표방하지만 인물 설정, 갈등 해소 방식,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차별화, 여성 간의 관계 설정 등을 통해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라는 것이다.

6)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사에서 소재나 이야기 방식이 사회적 수용 범위를 벗어나 중도하차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하지만 <청춘의 덫>(1978)은 혼전동거, 혼전임신 등의 비윤리성도 문제였지만 더불어 남자의 배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여성상이 문제가 되어 중도하차한 경우이다.

이러한 강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약하게 표상되고 있다. 그들은 소소한 일에도 감정기복이 심하고 여성을 잘 따르고 순종적이기까지 하다.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어눌하며 ‘찌질’ 하기도 하다. <아내의 유혹>에서 ‘정교빈’은 어리석고 교활하며 <아내가 돌아왔다>의 ‘윤상우’는 우유부단하다. TV화면은 ‘찌질남’, ‘연하남’, ‘초식남’으로 불리는 연약한 남성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드라마에는 아버지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병들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내에게 의존하며 주체적인 결정력이 없다. 아니면 일도 가족도 포기하고 사랑에 매달리거나 여성의 술수에 대책없이 속기만 한다. 때로는 여성에게 구원받기도 한다. 강한 여성에 비해 약한 남자가 부상하는 것은 강한 여성이미지의 이면이기도 하지만, ‘남자다울 것’을 요구받아온 남성들의 하소연이 방송의 새로운 소재가 되면서 ‘약한남자’ 그 자체가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TV속의 강한 여성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4. ‘강한 여성’의 정치적 의미

2008, 9년 드라마에서는 강하고 적극적인 여성이 대세였다. 과거에 드라마가 여성을 수동적이고 나약하게 표상한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표상은 긍정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강하지만 약하게 표현된다. 1970~80년대에 악녀는 주인공을 빛내주는 주변인물이었고, 1990년대의 악녀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악녀는 <아내의 유혹>에서 ‘신애리’처럼, 혹은 <천사의 유혹>의 ‘주아란’처럼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선천적으로 악한

여성이다. ‘신애리’는 세련된 도시여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며 욕망이 있고 카리스마가 강한 여성이지만, 못됐고 위협적이며 파괴적이다. ‘고은재’는 선한 인물을 대변하지만 이전의 여성처럼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여성이미지보다는 팜므파탈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드라마 속 강한 여성은 모두 팜므파탈로 공동체에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평강(아내)이거나 팔쥐모(어머니)였다. 1960, 70년대 드라마 속 현모양처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면 2000년대의 현모양처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가’이며 술수에도 능하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30년 이상을 순종적이고(아내), 여성스러우며(연인), 전통적인 외유내강의 가부장적 여성의 미덕을 내면화하고 있는(어머니) 여성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보여준다.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남녀 모두에게 억압적이었던 성이미지와 역할 구분이 드라마 속에서나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또한 체험과 상상력이 주요 자원인 현대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섞여있는 자연스러운 성 이미지는 장려할 만하다. 현실적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자각과 여성들의 요구가 강화되어가는 오늘날 텔레비전 드라마가 여성의 관점이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9년 드라마 속 ‘강한 여성’은 능력있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위협적이고 파괴적으로 그려지는 드라마 속의 강한 여성은 가부장적인 남성적 질서에서 위험요소를 암시한다. 2009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여성은 강하다. 반대로 남성은 더 이상 군림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합은 마치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쇠락한 것 같은 상상을 만들어낸다. ‘강한 여성’

의 표상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관계는 여전히 부계중심이고, 가정 내 갈등 또한 여전히 고부갈등이며, 친정집은 여전히 주변적 공간이라는 것은 은폐한다.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처가살이를 제외하면 모계중심의 가족은 없다. 친인척은 여전히 남편중심이며, 여성 친인척은 가정내 대소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만 긴밀하다. 텔레비전 드라마 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질서는 '강한 여성', 패권적인 여성이미지로 감춰지고 있다.

드라마 뿐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소위 '약한남', '초식남', '찌질남' 이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강한 여성, 약한 남자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과도한 표현은 목전에 산적한 양성평등의 과제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가모장제' 로 표현되는 언론의 담론도 그러한 염려를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디어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강력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여성문제의 의미가 격하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 전문분야로 여성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제고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회나 임금수준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의 권한과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남성위기론, 부권상실론, 가모장제 담론, 거기에 더해 드라마가 표상하는 '강한 여성' 상은 남성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이슈브리프

참 · 고 · 문 · 헌

- 김명혜 · 김순훈(1996). 여성 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제38호, 203~248.
- 김응숙(1995). 텔레비전 드라마(종합병원)의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제7호, 130~161.
- 남명자(1984). 텔레비전 드라마에 표출된 한국 여성상에 관한 분석. 『신문학보』제17호, 71~117.
- 정영희(2007). 여성주의적 요구와 가부장적 질서의 동거. 『미디어, 젠더 & 문화』제8호, 41~70.
- 정영희(2005).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